

‘중금리대출’ 외나무 다리서 만난 인터넷銀 vs 저축銀

중·저신용자 대출상품 봇물

가산금리 인하로 대출 늘려

1분 이내 ‘비상금 대출’ 인기

중금리 대출시장을 놓고 금리경쟁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포용적금융을 강조하면서 그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를 모시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 까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비중 높일 것”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금액은 1조2744억 원이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6%, 건수 기준으로는 38.5%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주주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 상품을 중심으로 한다. 은행업 진입 초기인만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별 금리〉

분류	은행	대출명	금리
시중은행	신한은행	사잇돌중금리대출	최대 0.20%P 인하, 최저 연 6.22%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최대 0.40%P 인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슬림K 신용대출	최대 0.60%P 인하, 연 3.40~6.65%
저축은행	KB저축은행	온라인 헛살론	최대 1.30%P 인하, 연 7.72~8.12%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비상금대출	연 5~6%



25%(2900여명)가 금리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KB저축은행은 기존 3~4일이 걸리던 일반 헛살론을 온라인 헛살론으로 전환하면서 전자적 처리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1.3% 금리인하로 제공한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6등급이 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최저 연7.72~8.12%에 이용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달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전문은행 ‘웰뱅’을 출시하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웰뱅 비상금 대출’을 선보였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5~6%대 금리로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문이나 패턴인증으로 1분 이내에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4~7등급이다”며 “웰뱅 출시 이후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의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나유리 기자 smahn1@metroseoul.co.kr

〈P2P대출 중개에 관한 국가별 이용자 보호방안〉

국가	이용자 보호 방안
영국	·위험에 대한 명확한 고지, 흥보문구의 명확화 ·14일 이내에 투자, 차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투자결정에 필요한 사항 공시 의무화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 베이스로 이용자 신원 조회 ·일정한 신용평가 점수가 있어야 P2P대출 가능
중국	·대출자와 투자자의 자금 제3자 보관 ·자금수납 시스템 보유 ·투자결정에 필요한 사항 공시 의무화

‘투자자 보호’ 없는 모호한 P2P 규제

투자한도 제한 등 보호법규 ‘미비’

#. 최근 P2P 대출투자를 시작한 김모(40)씨. 김모씨는 P2P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투자한도 제한이 투자금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며 “과연 투자자 보호제도가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P2P대출의 관리 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대출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P2P업체에 따르면 P2P업체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P2P대출규제가 외려 P2P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IT기술을 활용한 P2P대출의 특성을 반영하기엔 무리라는 것.

특히 P2P업체는 가이드라인 가운데 투자한도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투자 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 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부동산과 상품에 한해 추가 1000만원 가능). 반면 소득요건이 충족된 투자자(이자 배당 소득 2000만원, 사업 균로소득 1억원 초과)라면 연간 1개 P2P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한도 제한은 투자금액만 줄였을 뿐 투자금의 위험성엔 변함이 없어 투자자 보호 법규로 보기엔 미비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국내 P2P금융 규제와 차이가 크다. 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하기보다 P2P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측면이 크다.

P2P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P2P업체의 명확한 고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투자자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금융 전문가는 외국의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제도에 앞서 ‘대출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밀한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는 대출액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투자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게 대출액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내부에서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의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P2P업체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명확한 대출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이 성장하면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P2P업체 대표를 만나 문제점을 듣고 제도마련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투자자만을 위한 보호보다 P2P성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로 글로벌 성장 ‘탄력’

선진국·신흥국 경기회복 지원 총력

OECD 회원국 재정적자 비율 감소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이 경기회복 지원,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는 교역 경로를 통한 글로벌 파급효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일정 부분 뒷받침해 향후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20일 발표한 ‘해외 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선진국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대체로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살피면 지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는 8.4%로 크게 상승했지만 2016년 2.8%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이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 역시 지난 금융위기 이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공공투자 증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세계 경제 성장전망 상향 조정의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규모 세제 개혁을 통한 감세,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법안세 영구 감세, 개인소득세 인하, 해외유보소득 송환 등 세제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세금감면(재정적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제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기관들은 증산증 소득 증대, 기업투자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4년간의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2018~2021년 중 총

460억 유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재정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경우 내년 독일 성장률은 0.3%포인트 상승한 연 1.9%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는 지난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매년 정부지출을 10% 내외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와 경제 개혁 등을 토대로 당분간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다만 “각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정확대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EU의 정부 부채 비율 기준(GDP 대비 60%)을 상회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보험사기 4건 중 3건 “허위·과다 사고”

보험사기 4건 중 3건은 허위·과다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변혜원 연구위원이 20일 개최한 ‘연성 보험사기의 특징과 방지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허위입원 또는 보험사고 내용을 과장하는 허위·과다 사고에 속하는 보험사기는 총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75.2%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피해 과장 및 병원 과장 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등 연성사기와 관련된 유형의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기회주의적 보험사기라고도 불리는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 시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이른다”며

“충동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연성 보험사기법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결과에 따르면 살인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허위입원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과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등 연성사기와 관련된 유형의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연구위원은 “평범한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설계에 대한 점검과 불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연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국내 연성 보험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심리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